

온실가스 감축에 산업경쟁력 고려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김 현 제



202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체제인 '신기후체제'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지난 12월 14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시키는 신체제 구축의 기본틀이 합의되었으며, 파리에서 개최될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2009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국내외에 공표했었다. 당시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이와 같은 목표의 달성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당시 팽배했지만 정책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개도국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배출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업·건설·수송 등 부문별 이행수단을 제시했으며 산업부문은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총감축량의 약 63%를 책임지도록 의무를 설정했다. 그런데 지난 12월 초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이 제시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의 주요대상인 산업계는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들은 대내외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는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제도 시행 초기에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하는 등 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대내외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기업들의 입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세계 7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반영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산업계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당면과제임을 인식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